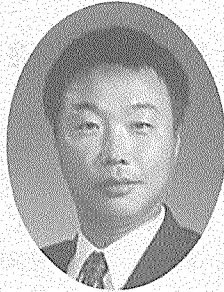


에너지정책의 근본개혁이 시급하다



장 현 준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많은 국민들이 최근의 고유가 사태와 정부의 대응자세를 지켜보면서 걱정과 함께 허탈하게 느끼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별로 한 것이 없구나 하는 심정 때문이다. 두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를 겪고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고유가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십 여년 전에 내놓았던 대책을 자구도 별로 바꾸지 못한 채 내놓았을 만큼, 고유가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사실 특별한 것이 없다. 다행히 지난 주말 미국 행정부가 전략비축유(SPR) 3천만배럴 방출을 결정함으로써 국제유가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태가 악화되어 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우리는 꿈쩍없이 당하고 있어야 할 처지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후 정부는 다시 고유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소비구조가 그대로인 한 뾰족한 대책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는 여기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옹호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고유가」라는 상황에 너무 혼란스러워하며 근시안적인

시각과 대책에 머물러 있지 않으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냉철히 한번 짚어보고,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넓게 바라볼 것을 권고한다.

고유가의 원인

이번 고유가의 책임공방이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에서 팽팽히 벌어지고 있다. 물론 많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OPEC의 감산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철저히 좌우되는 국제 원유시장에서 공급을 줄인 OPEC의 결정과, 과거와는 달리 일사불란하게 감산이행에 나선 회원국들의 단결된 행동이 결국 현재의 고유가를 불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맞물려 수요측면에서 장기간 지속된 미국의 호황과 아시아의 수요급증이 유가의 상승을 부추겼다.

그러나 이를 한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 세계 최강 미국 - 스스로 산유국이면서, 또 OPEC의 최대 실력자 사우디아라비아를 최우방으로 두고 있는 미

국이 이번 고유가 파동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어째서 현재 미국이 국제 원유시장에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유 공급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미국의 오판(誤判)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프전 이후 미국은 경제제재 조치 등을 통해 중동지역의 골치거리인 이란, 이라크를 자국의 통제력안에 두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이들 지역의 경제력을 억제하면서 이들로 인한 정치·군사상의 돌발상황만 막을 수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타 산유국들로부터 자국 수요에 필요한 충분한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물론 순간적인 수급차질로 인해 일시적인 가격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자국 석유 메이저들의 광대한 원유재고로서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미국의 계산은 잘 맞아 떨어져 한 때 사상 초유의 저유가 시대를 열기도 하였다.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유일 강대국의 신화를 구축하였다.

예상밖의 수요급증

그러나 여기에서 미국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 있었다. 한 때 금융위기로 침체직전까지 몰렸던 아시아가 돌연 호황을 누리면서 국제 원유수요는 급증을 거듭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경제 역시 지속된 호황으로 원유수요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뜻밖에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급은 이에 맞추어 증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미국이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등의 석유산업을 오랫동안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막대한 매장량을 보유한 이들 국가를 불량국가로 지목해 석유산업 투자를 막음으로써 지금과 같은 공급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이라크의 경우 경제제재가 없었다면 지금쯤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먹는 하루 800만배럴의 원유생산능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의

현재생산량은 지난 80년대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란과 리비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의 생산능력은 한동안 정체되었으며, 결국 최근의 수요급증에 맞추어 신속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원인이 되었다.

새로운 정책적 시각이 필요하다

며칠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고어 부통령이 그동안 줄곧 앞서오던 공화당 부시 후보를 역전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물론 앞으로 몇 차례의 TV 토론 등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 아직 선불리 예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만약 고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은 개도국을 기후변화협약에 참여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설마하는 심정으로 마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번 고유가 사태와 고어 부통령의 당선은 일직선상에서 놓고 보아야 한다. 미국은 고유가와 고어를 등에 업고 기후변화협약에 사활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적했다시피 이미 미국은 석유시장의 공급측면에서는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자국에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경쟁적인 석유 소비국을 견제하는 수밖에 없다. 즉 공급측면에서 수요측면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얘기다. 경쟁국, 특히 아시아의 석유소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기후변화협약이다. 이는 중동지역에 대한 통제는 군사적으로 가능했지만 아시아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이들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환경협약이면서 경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의 고어부통령은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기후변화협약을 들고 있다. 마치 음모론처럼 모든 환경이 맞추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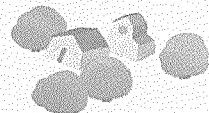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한 것이 좋다. 너무 넓어도 안될 것이지만 좁기만 한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우리는 고유가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 너무 매달리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도 말이다.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 10부제니, 목욕탕 주 1회 휴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그럴 바에야 정부는 솔직히 지금 당장의 대책이 없음을 인정하고, 보다 장기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장기적인 정책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면, 한번쯤은 이번 고유가가 가져올 -석유시장 이외의- 다른 측면으로도 시각을 넓히기 바란다.

에너지는 이제 성장의 동인(動因)이 아니라 장애(障礙)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요소의 대량투입에 기반한 대량생산체제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경제체제로는 더 이상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는 것이 바로 4대 부문의 개혁이었다. 실익보다는 몸집에 연연했던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기관이 뼈를 깎는 내실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단 4대 부문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경제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작업이 되어야 한다.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만 과거의 행태를 고집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바로 에너지 부문에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하루 속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는 재도약을 꿈꾸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역을 맡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중후장대형·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는 이제 고부가가치형·에너지저소비형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과거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에 에너지를 풍족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던

에너지정책 역시 이에 걸맞게 개편되어야 한다. 가격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에너지가 보다 가치있고 효율적으로 소비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루 속히 구축하여야 하며, 자원의교 및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구축을 통해 에너지 공급안보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이 없는 기존의 정책 추진체계 등도 전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적인 역량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정책은 지금껏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에 따라 21세기 우리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용어해설



• 공동코뮤니케(Joint Communique)

북한과 미국이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여러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 용어의 의미와 효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선 양국간 회담을 마친 뒤 그 결과를 공동선언(Joint Statement), 공동 코뮤니케(Joint Communique), 공동 성명(Joint Declaration)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한다.

공동 코뮤니케와 공동 성명은 국제법상 그 의미에 큰 차이가 없으나 외교관례적 측면에서 구별된다. 공동 코뮤니케는 양국간 향후 정책 방향만을 제시할 때 쓰이는데 비해 공동 성명은 좀 더 구체적이며 정치적 효력을 갖는다.

북한과 미국이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한 것은 향후 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나가겠다는 의도를 담고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72년 양국간 수교의 밑거름이 된 상하이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한 바 있다.